

주간 통일정세

2017-5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23	北, 당 세포위원장 대회 이틀째 회의 진행...김정은 참석(연합뉴스)
	12.24	北 김정은 “지금까지 시작 불과...통 큰 작전 더 과감히 전개”(연합뉴스)
		北 외무성 “자위적 핵 억제력 더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연합뉴스)
	12.25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100회 생일 맞아 ‘업적’ 선전(연합뉴스)
		北 신문 “위성 발사, 합법적 권리행사” 거듭 주장(연합뉴스)
		北 아태평화위, 안보리 새 제재결의 “단호 배격”(연합뉴스)
		北 신문, ‘김정은 연설’ 이행 독려...“자자구구 학습해야”(연합뉴스)
12.27	北 신문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법적투쟁 벌여야”(연합뉴스)	
北 신문 “대북압살 광분할수록 무자비한 보복세례만 불러”(연합뉴스)		
군사	-	-
경제	12.23	北,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설립 결정(연합뉴스)
		中 11월 대북무역 올해 최저수준...제재여파로 작년 반토막(연합뉴스)
사회 문화	12.25	北 김정은, 조모 생일에 육아원 등에 식료품 전달(연합뉴스)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위훈자에 표창(연합뉴스)
		평안남도 은산군 새 체육관 준공식 진행(연합뉴스)
외교 국방	12.23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연합뉴스)
		츄츄해진 대북 해상 차단망...항구서 의심 선박 검색 의무화(연합뉴스)
		북한 대사 추방한 페루, 외교관 2명 더 쫓아내(연합뉴스)
	12.26	‘북한 돈줄 차단’ 요청받은 태국, 물적·인적교류 사실상 중단(연합뉴스)
	12.27	미 정부, 북한미사일 개발주역 리병철·김정식 단독제재(연합뉴스)
	12.28	“스위스, 北 인물 16명·기관 1곳 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2.23.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	-
12.24.	참석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2. 23.

■ 北, 당 세포위원장 대회 이틀째 회의 진행…김정은 참석(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일 회의가 12월 22일에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지도 밑에 대회는 계속되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2일 회의에서는 각급 단위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세포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원인들을 분석 총화하는 토론들이 계속됐다”고 소개함.
- 이어 “대회에서는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정책 관철에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일하는 모양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덧붙임.

2017. 12. 24.

■ 北 김정은 “지금까지 시작 불과…통 큰 작전 더 과감히 전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23일 막을 내린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각급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우리 당의 당 세포 중시 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 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폐회사에 앞서 김정은은 이날 ‘당 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으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지금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말단혁명 초소인 당 세포에서부터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법기관들에서

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저애(저해)하고 해독적 작용을 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강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아직도 당 세포들의 사업기풍과 실천력, 활동성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높이에 따라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 세포 구성원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 현상을 지적한 뒤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실천력이 강하며 품성이 좋고 대중의 신망이 있는 핵심 당원들로 세포위원장 대열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언급, 향후 당 세포위원장의 세대교체도 시사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2. 24.

■ 北 외무성 “자위적 핵 억제력 더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 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비난했으며,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변함.

■ **北, 김정은 조모 김정숙 100회 생일 맞아 ‘업적’ 선전(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100회 생일을 맞아 그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이를 본받을 것을 요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3개 면에 걸쳐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정론과 수필 등을 통해 김정숙의 업적을 선전하고 그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고, 정론에서는 “주체조선의 최후 승리가 다가올수록 원수들은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감히 어찌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 미쳐 날뛰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천만이 어머니(김정숙)을 닮은 수령 결사옹위의 투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시대와 조국이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에 내리는 엄숙한 구령이고 이 나라 아들딸들이 스스로 다지는 혁명의 선서”라고 강조함.
- 북한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로두철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숙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숙의 업적을 부각했으며, 노동신문은 북한이 김정숙의 생일 100회 기념우표를 발행한 소식을 전하고,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김정숙 생일 100회를 기념한 논설을 게재하였으며,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신파혁명사적지에 김정숙 동상을 세운 이래 지난 40여 년간 약 500만 명이 다녀갔다고 전함.

2017. 12. 25.

■ **北 신문 “위성 발사, 합법적 권리행사” 거듭 주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함.
- 신문은 알제리 통신위성 발사와 베네수엘라의 원격탐지위성 추가발사 등을 사례로 나열하면서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덧붙임.

■ **北 아태평화위, 안보리 새 제재결의 “단호 배격”(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아태평화위는 25일 대변인 성명에서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인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 낸 이번 ‘제재결의’를 그 어떤 정당성과 합법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문서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난했는데, 성명은 “국가 핵 무력 완성 대업의 빛나는 실현과 더불어 가질 것은 다 틀어쥔 우리가 미국이 강요하는 제재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정의의 핵을 내놓고 ‘고사’당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어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우리 인민의 절멸을 노리고 불의적인 군사적 타격을 은밀히 준비하면서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제재소동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벌여놓는 미제 야수들과 최후의 결판을 보아야 한다”면서 “추종세력들까지 씨도 없이 박멸하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복수의 웨침(외침)”이라고 주장함.
- 성명은 “제재결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방정을 떠는 일본 반동들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구걸하면서도 제재압박 높음에 앞장서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도 그 종착점은 긴장격화이고 전쟁이며 저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무섭게 깨달아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으며, 이어 “주변 나라들은 미국의 강권에 눌리어 제재놀음에 손들어주면 자기 안전이 보장되고 주변 정세도 평온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과 이웃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채우려는 비열한 속타산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때늦은 후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우회적으로 비난함.
- 성명은 “우리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정의의 핵이지 결코 중국이나 로씨야(러시아),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위협하는 핵이 아니다”면서 “어떤 제재압박 소동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며 위대한 병진의 기치 높이 국가핵무력 강화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함.

2017. 12. 26.

■ **北 신문, ‘김정은 연설’ 이행 독려…“자자구구 학습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섬멸전’을 주문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 대한 ‘학습 열풍’을 주문하며 전 사회적인 이행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1면에 게재한 사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에 제시된 사상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전담적인 학습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모든 당 조직과 당원들이 “연설을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체득하기 위해 자자구구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2017. 12. 27.

■ 北 신문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법적투쟁 벌여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헌법절) 45주년을 맞은 27일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법적 투쟁을 강도 높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주의 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이렇게 주장함.
- 신문은 또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법 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는 원수들의 준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역설함.

■ 北 신문 “대북압살 광분할수록 무자비한 보복세례만 불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대조선(대북) 압살에 광분할수록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함.
- 신문은 이날 ‘주체 조선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오늘 우리 군대는 미국을 조준경 안에 잡아넣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마음먹은 대로 두들겨 팽 수 있게 각방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힘의 과시에 매달릴수록 본토를 핵 참화 속에 몰아넣고 이 행성에서 지리멸렬하는 길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은 세계적인 핵 강국인 우리에게 가하는 제재압박이든, 군사적 공격이든 그것이 그 어떤 무서운 파멸로 이어지겠는가에 대해 상상이나 해보고 날뛰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으며, 그러면서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원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변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2017. 12. 23.

- **北,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설립 결정(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시 외곽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부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강남경제개발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1일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중앙통신은 강남경제개발구에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12. 23.

- **中 11월 대북무역 올해 최저수준…제재여파로 작년 반토막(연합뉴스)**
 - 로이터가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중 무역액은 전월 3억 4천 490만 달러(약 3천 725억원)보다 12.5% 증가한

3억 8천 800만 달러(약 4천 190억원)를 기록함.

- 그러나 작년 11월 6억 1천 320만 달러(약 6천 623억원)와 비교하면 북중 무역액은 1년 새 36.7% 감소함.
-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월 9천 75만 달러(약 98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작년 같은 달 2억 6천 220만 달러(약 2천 832억원)보다 61.8% 줄어든 1억 18만 달러(약 1천 82억원)였으며, 중국의 11월 대북 수출액은 2억 8천 784만 달러(약 3천 109억 원)로 전월(2억 4천 420만 달러)보다 17.9% 늘었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2. 25.

■ 北 김정은, 조모 생일에 육아원 등에 식료품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모 김정숙의 생일인 24일에 전국의 육아원과 양로원 등에 식료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12월 24일을 맞으며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내주셨다”고 전함.
- 이번 식료품 전달은 24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의 100회 생일이자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일이라는 점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위훈자에 표창(연합뉴스)**

-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과학자와 기술자, 군인, 돌격대원 등에게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칭호, 김일성 청년영예상, 김정일 청년영예상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지난 21일에 발표되었음.

■ **평안남도 은산군 새 체육관 준공식 진행(연합뉴스)**

- 평안남도 은산군 읍지구에 새로 건설된 체육관 준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이 25일 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2. 27.

■ **미 정부, 북한미사일 개발주역 리병철·김정식 단독제재(연합뉴스)**

-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로 꼽혀온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 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미국 정부의 단독제재 대상에 포함됨.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리병철과 김정식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함.
-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최대의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2. 23.

■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든 정유제품 공급량을 50만 배럴로 더 줄어든게 하였으며,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및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류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한 대목이 주목됨.
- 현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하였으며, 지금까지 대북 제재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개인 63명, 단체 53명)에 더해 개인 16명, 단체 1명이 추가되었는데,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임.
- 그밖에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김.

■ 촘촘해진 대북 해상 차단망...항구서 의심 선박 검색 의무화(연합뉴스)

- 새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대북 해상차단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 도입, 대북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등을 위한 해상 수송을 막기 위해 강화된 조치들을 담았기 때문임.
-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 각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선박을 동결하고 억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종전 제재 결의에도 있지만,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한 선박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단속 가능 선박 범위가 크게 넓어짐.

- 또 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 안에서 나포, 검색, 동결 및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회원국 간에 의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류도 의무화함.

■ 북한 대사 추방한 페루, 외교관 2명 더 쫓아내(연합뉴스)

- 페루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외교관 2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15일 안에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함.
- 추방 대상은 박명철 1등 서기관과 지혁 3등 서기관이며, 페루 정부는 이들이 공식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추방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다만 페루 외교부는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핵확산 방지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2017. 12. 26.

■ ‘북한 돈줄 차단’ 요청받은 태국, 물적·인적교류 사실상 중단(연합뉴스)

- 26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태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2275호에 관한 자체 이행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는데, 태국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했으며, 새로운 비자 제도 등을 통해 북한과의 인적 교류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부작용 없는 평화적인 한반도 긴장 해소와 비핵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태국은 이를 위해 무기 및 관련 물질,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 기술, 사치품 등 안보리가 제시한 북한과의 교역 금지 품목에 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태국은 지난 3월 북한 선적 화물선 ‘타이 안’(Tai An)호가 북한산 석탄을 실어 수입하려 한다는 비공식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 끝에 이를 영해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고, 태국 해양 당국은 같은 달 자국 영해에 허가 없이 들어온 북한 선적의 선박 ‘오가산’(Okasan)호를 조사한 뒤 영해 밖으로 내보냈다고 밝힘.
- 태국은 의심스러운 북한 인사의 자국 방문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비자 제도도 도입했으며, 이어 지난해 9월 북한 북동부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직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을 통해 3만 달러를 지원한 것 이외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금융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1990년과 1991년 2개 북한 기업의 광산 투자를 허용했지만, 이들 기업은 8년 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고, 태국 국제협력청은 태국-북한 간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서 농업 관련 ‘원격탐사’, ‘지리정보 시스템’ 관련 기술훈련을 제외하도록 2016~2017 계획을 수정하는 등 북한의 핵 및 관련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서는 전함.

2017. 12. 28.

■ **“스위스, 北 인물 16명·기관 1곳 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 스위스 정부가 대북제재 명단에 북한 인물 16명과 기관 1곳을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는데, RFA는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 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이번 제재 명단에 추가됐으며, 또 최석민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대북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의 해외 금융인 14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음.
- 기관으로는 북한군을 관장하는 내각 기관인 인민무력성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었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28		미 정부, 한미연합훈련 공개언급 삼가기로...‘대화 신호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27		中, 韓기자 폭행 “법에 따라 조사중...결과 나오는 대로 통보”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26	강경화 “위안부합의 피해자소통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연합뉴스)	일본 관방, 위안부TF 발표 앞두고 “착실한 이행이 중요” 압박(연합뉴스)
		위안부합의 검토TF “피해자의견 충분히 수렴안했다” 결론(연합뉴스)	
	12.27	‘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고위급 비공개 협의서 이뤄져”(연합뉴스)	일본 외무상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시 한일 관계 관리 불가능” (연합뉴스)
		강경화 “피해자의견 듣고 한일관계 영향 감안 입장수립”(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26		중 매체 “미, 평창올림픽까지 군사훈련 중단 제안 받아들여야”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23		푸틴 “美 새 안보전략 공격적...핵전력조약도 위반” (연합뉴스)
	12.27		라브로프, 킬리슨에 “미,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 용인못해”(연합뉴스)
	12.28	미-러 외무장관 “북한 핵보유국 인정안해...외교해법 계속노력”(연합뉴스)	
분류	일	중국	일본
중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2. 28.

■ 미 정부, 한미연합훈련 공개언급 삼가기로…‘대화 신호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한국 또는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 “더욱 조용하고 신중히 하기로 계획했다”고 CNN 방송이 고위 관료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CNN에 이번 결정은 북핵 위기를 진정시킨다는 목표로 해당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민감한 대화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에게 더 많은 자유재량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부르는 등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과 조롱을 퍼붓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언급을 ‘톤다운’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보고라인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호전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쪽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함.

나. 한·중 관계

2017. 12. 27.

■ 中, 韓기자 폭행 “법에 따라 조사중…결과 나오는 대로 통보”(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차관보간 업무 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 주요 후속조치의 착실한 이행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윤순구 차관보와 쿵위안유(孔鉉佑) 부장조리는 문 대통령 국빈 방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양국 외교부가 중심이 돼 정상간 합의사항 및 공감대를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취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아울러 윤 차관보는 문 대통령 방중 기간중 우리 기자가 중국 측 경호요원의 집단폭행으로 부상을 입은데 대해 중국측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쿵 부장조리는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 한·일 관계

2017. 12. 26.

■ 강경화 “위안부합의 피해자소통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7일 발표할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에 대해 “(한일 간)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 강 장관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 특히 강 장관은 TF의 검토 결과 후속조치로 위안부 합의 유지 또는 파기 등 정부의 입장 정리에 대해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일본 관방, 위안부TF 발표 앞두고 “착실한 이행이 중요” 압박(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 스가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고 싶고, 아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 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은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내정”이라고 전제하고 “(양국의 위안부 합의라는) 약속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거듭 이행을 요구함.

2017. 12. 27.

■ **위안부합의 검토 TF “피해자의견 충분히 수렴안했다” 결론(연합뉴스)**

-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평가함.
- TF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결론부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함.
- 이와 함께 TF는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해외소녀상’ 관련 이면합의..“고위급 비공개 협의서 이뤄져”(연합뉴스)**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힘.
-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 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함.
-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 **강경화 “피해자의견 듣고 한일관계 영향 감안 입장수립”(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대해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힘.

- 강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함.
- 또한 “위안부 문제는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 사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함.

■ 일본 외무상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시 한일 관계 관리 불가능”(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7일 한일 간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함.
- 그는 이날 한국내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검증 결과 발표후 담화를 내고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함.
- 그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 했다”고 설명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2. 26.

■ 중 매체 “미, 평창올림픽까지 군사훈련 중단 제안 받아들여야”(연합뉴스)

- 중국 관영매체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함.
- 2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한국의 군사훈련 연기 제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 정책의 전환으로 북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감안하면 이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촉구함.

- 신문은 또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일정기간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 해법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의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미가 이를 토대로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7. 12. 23.

■ 푸틴 “美 새 안보전략 공격적…핵전력조약도 위반”(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군 지휘관 행사에서, 최근 공개된 미국의 새 안보 전략보고서와 관련, “외교적으로 표현하면, 뚜렷이 공세적인 요소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공격적이다”고 규정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군에 당부함.
-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설치하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거론하며, 이들이 양국의 기념비적인 INF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공 미사일시스템을 가동하면 언제든 중거리 순항 미사일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이 UNF 파괴 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러한 잠재 위협에 제 때 적절하게 대응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함.

2017. 12. 27.

■ 라브로프, 킬러슨에 “미,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 용인못해”(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과의 협상 개시 필요성을 강조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러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하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소개함.

-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 수사(修辭)와 역내 군비 증강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함.

2017. 12. 28.

■ **마리 외무장관 “북한 핵보유국 인정인해…외교해법 계속노력”(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27일(현지시간)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힘.
-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어트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전함.
-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장관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으며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라. 중·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12.27	몽골 내 북한 노동자 철수 시작(자유아시아방송)
국제동향	12.28	에티오피아 “북한 노동자 15명 근무 중..40명 허가증 중단”(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2.23	북 전거리교회소, 굶주림·전염병으로 사망자 속출(자유아시아방송)
	12.26	북, 산림복원사업을 대체식량 개발과 연계(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12.28	북, 작년에 ‘유럽 장기유학생’ 파견 급증…노동자는 많이 줄어(연합뉴스)
	12.27	통일부 “길주군 탈북민 일부 피폭 의심…핵실험 영향 단정못해”(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25	영국 외무차관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우려”(미국의소리)
대북지원		특이사항 없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2. 27.

■ “몽골 내 북한 노동자 철수 시작”(자유아시아방송)

-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비자 기간 만료와 함께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이달 말까지 일부가 철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짐.
- 몽골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한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근 본국으로 돌아감.
- 몽골에 있는 한 대북 소식통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 전 울란바토르역에 모여 베이징행 열차에 탔다”며 “현재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내년 초까지 대부분 철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북한 노동자들의 이번 철수는 유엔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이뤄짐.
- 몽골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함. 한때 그 수가 최고 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014년부터 몽골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듦.

2017. 12. 28.

■ 에티오피아 “북한 노동자 15명 근무 중...40명 허가증 중단”(미국의소리)

-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는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힘. 아프리카 나라 에티오피아에 15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됨.
- 에티오피아는 지난달 2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15명에게 올해 5월 이전 노동 허가증이 발급됐으며, 이 중 3명의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힘.
-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말 것을 노동·사회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임.
- 또 이행보고서는 노동·사회부가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40명의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추가로 중단했다고 명시함.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도 북한 노동자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이달 12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담음.
- 이탈리아는 2375호가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이탈리아 관할 기관이 결의 채택 이전에 발급된 일부 북한인 노동 허가증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2. 23.

■ 북 전거리교화소, 굶주림·전염병으로 사망자 속출(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이 많이 수감되는 12호 전거리교화소에서 여전히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영양실조와 강제노동, 구타와 전염병까지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음.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위치한 제12호 전거리교화소는 탈북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밀수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사람, 각성제를 사용한 사람 등이 수감된 곳으로 여전히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짐.
- 최근 전거리교화소를 출소한 30대 북한 여성은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성 수감자가 3일에 한 번씩 10구 정도 시체를 모아 손수레에 싣고 가까운 산으로 운반해 태워 처리하는데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염병과 굶주림 등으로 하루 평균 3명은 죽는 것 같다”고 말함.
-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됨. 바로 굶주림에 따른 영양실조와 전염병임.

2017. 12. 26.

■ 북, 산림복원사업을 대체식량 개발과 연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음. 중국에서 개최된 “동북아산림보전과 국제협력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산림복원을 대체식량 개발과 연계해 발표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힘.
- 중국의 한 소식통은 23일 “지난 5일(화)부터 9일까지 중국 항주에서 ‘제3차 동북아산림보전과 국제협력 학술세미나’가 열렸다”면서 “세미나에 참가한 5개국 중에서 북한은 산림복원의 목적을 대체식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2014년부터 시작된 ‘동북아산림보전과 국제협력학술세미나’는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황폐화산림복구 국제적 네트워크”라면서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모인 각국의 전문가들이 산림연구동향을 공유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정보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당초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중국정부가 북한이 개입한 공식행사의 개최를 사실상 거부해 행사장소를 향주로 옮겨 비공식 행사로 진행됐다”고 지적함.

2017. 12. 28.

■ **북한, 작년에 ‘유럽 장기유학생’ 파견 급증…노동자는 많이 줄어(연합뉴스)**

- 작년에 북한이 교육을 위해 유럽에 파견한 유학생은 많이 증가한 반면에 외화벌이를 위해 유럽에 보낸 노동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28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은 모두 312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는 직전 연도인 2015년 342명 보다 30명 줄어든 것임.
-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 수는 지난 2008년 748명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2011년엔 433명, 2012년엔 26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으로 집계됨.
- 이는 해외 파견자 가운데 탈북자가 속출하면서 파견자에 대한 신분 검열을 강화하고 가족동반을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작년에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들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1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높아졌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2. 27.

■ **통일부 “길주군 탈북민 일부 피폭 의심…핵실험 영향 단정못해”(연합뉴스)**

- 통일부는 27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 일부에게서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핵실험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통일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길주군 출신 일부 탈북민의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연령과 흡연력 등) 여러 교란변수로 인해 그 시기와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전함.

- 통일부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해 ▲전신계수기 ▲소변시료분석 ▲안정형 염색체이상 분석 등의 피폭 검사를 했음.
- 이 중 방사선 피폭에 따른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는 ‘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 검사’에서 4명이 최소검출한계인 0.25 그레이(Gy)를 넘는 수치를 보였음.
- 4명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주민은 2명으로, 방사선 피폭도 원인일 수 있지만 북한에서의 거주환경이나 고령의 연령, 장기간의 흡연 등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2. 25.

■ 영국 외무차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우려”(미국의소리)

- 영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북한 정권의 방식도 비판함.
- 영국 외무부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차관이 20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아마드 외무차관은 지난 달 초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자 10명 문제와 관련한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힘.
- 아마드 차관은 영국은 중국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아울러 영국 정부는 난민들을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히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박해를 받는 국가라고 강조함.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